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 학습자 발달 중심, 지역사회 협력, 실습 내실화 등 현장성 강화
- ◆ 초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및 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
- ◆ 체제발전(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대 통합 등)은 지역 상황 고려해 모색
- ◆ 교육부, 거버넌스 구축하여 2021년 내 단계적 시행 계획 마련해야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2월 15일(화),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숙의 결과는 각계를 대표하는 핵심당사자* 31명 집중 숙의(9~12월, 총 6회)를 통해 ‘협의를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에 권역별 경청회(8~9월, 총 4회)와 미래교육체제 대국민 여론조사(10월, 총 24,656명 참여),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11월, 일반국민 294명 참여)의 결과가 제공되었다.

* 교육청,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및 경제·사회·과학·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 시민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11.11(수) 보도자료 참조, 온라인 숙의 결과 [붙임] 포함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추진 체계 >



※ 검토그룹 온라인숙의 참가자는 여론조사 참가자 중 성/지역/연령 분포를 고려해 구성

【 협의문 주요 내용 】 ※ 협의문은 [붙임] 참고

- **(미래교육방향과 의제 선정)** 숙의단은 학습자의 삶을 중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기 위해 교원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과 ‘교원양성 규모’ 를 선정하였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 발전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원의 상(像)과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하고, 학습자 이해 및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교육 실습 내실화 등 현장적합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미래교육(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온·오프 병행 수업 등)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을 모색하고, 중등의 경우는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추가 제안사항)** 또한, 숙의단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

□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한다.

< 협의문에 기초한 교육부의 주요 역할 (요약) >



- 관련 주체들이 교원의 상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초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질 관리와 양성경로 정비를 통하여 양성 규모를 줄이되,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한다.

- **(교육부)** 교육부는 (예비)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룬 시일 안에 구축하여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현장 관련 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 이번 집중 숙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하면서 현시점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동의가 가능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숙의를 통해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의제 관련 의견수렴(4~7월) / [교육부] ‘미래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사회적 협의 추진 협력 요청(7.23,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 라면서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했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 고 밝혔다.

붙임 :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

별첨 : 정책집중숙의 참고자료

 <p>공공누리</p>	 <p>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황지혜 서기관(☎02-2100-1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

[붙임]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속의 결과 및 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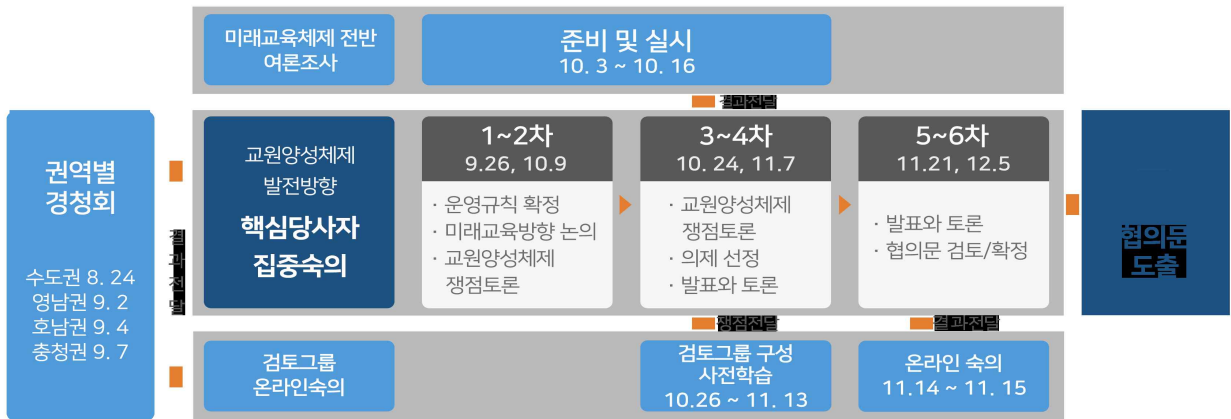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 적절한 사회적 협의에 근거한 미래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반 마련 필요
-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속의 추진 결정(제19차 전체회의, ‘20.7.30)
 - ※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의제 관련 의견수렴(4~7월) / [교육부] ‘미래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사회적 협의 추진 협력 요청(7.23,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

II. 추진 개요

-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집중 토론하는 ‘핵심당사자 집중 속의’와 일반 국민 중심의 ‘검토그룹 온라인 속의’로 구성하여 다양한 참여 보장
 - ※ 권역별 경청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심도 있는 논의 지원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속의 추진 체계 >



III. 추진 경과

□ 정책 집중 속의 준비

- 기관 추천을 통해 교육청, 교원,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대표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핵심당사자 집중 속의 참여자 구성 완료(~9.25)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참여자 추천 요청 기관 명단 >

구분	추천 기관 (인원)	구분	추천 기관 (인원)
교원 (4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	전문 가 (8인)	[재정](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1)		[경제인구](1) 한국개발연구원
	교사노동조합연맹(1)		[사회·교육](1) 한국교육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1)		[과학기술](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비교원 (4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2)		[산업·노동](1) 한국노동연구원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2)		[문화·예술](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원양성 기관 (6인)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2)		[언론](1)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사범대학장협의회(1)		[정치·미래](1) 국회미래연구원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1)	[지역·시민](2)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1)	[청년](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교육청 (4인)	전국국공립대학교교육대학원장협의회(1)	[학부모](2) 학부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4) ※ 권역별 추천		

- **집중숙의 절차 지원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산하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집중숙의 진행 소위원회’** 구성(~9.25)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집중숙의 진행 소위원회 명단 >

이름	직책	현 소속 전문위원회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책임전문위원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김은정	충현중학교 교장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국교위설치지원전문위원회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회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고등직업전문위원회

※ 행사운영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선정(9.25)

- **원활한 숙의 진행을 위해 참여자 사전모임 실시**(9.17, 9.22)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명 내외로 3차에 나누어 진행

□ 정책 집중 숙의 진행 ※ 코로나19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

- 1~2차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를 통해 **운영규칙 마련, 미래 교육 방향 논의 및 교원양성체제 전반의 쟁점 토론**(9.26, 10.9)

※ 2차 숙의 전까지 숙의단 구성원이 의제 및 각종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숙의단 내 공유

- 3~4차 숙의에서는 중요성, 시급성,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의제를 ‘양성교육과정’ 과 ‘교원양성규모’**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숙의단 중 자원자의 **발표와 쟁점 토론**(10.24, 11.7)

-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참여자 구성 및 사전학습(10.26~11.13), 온라인 숙의 및 조사(11.14~15) 결과를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 전달(11.21)

※ [구성] 여론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 2천명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 기준 294명 모집 → [사전학습] 교원양성체제 전반, 여론조사 결과 등 → [숙의 및 결과] 150여 명으로 양일에 나누어 참여하고, 온라인 숙의 후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쟁점에 대한 의견 분포 조사

<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결과 >

-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서 논의된 미래 교육 방향, 교원의 역할·역량,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초·중등교원 양성 연계 필요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부분 동의

목차	질문	동의	비동의
미래 방향과 교원	"학습자의 삶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교육(학습)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100%	0%
	교원은 지식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 '기획자', '소통-협력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여야 한다.	100%	0%
	교원의 역량 중 '이해와 공감 역량', '소통 역량', '지역과의 연계 역량'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99%	1%
양성교육과정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교 현장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99%	1%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100%	0%
초중등 연계	학생 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초중등교원 양성의 연계가 필요하다.	87%	13%
이행 방식	논의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실행을 위해, (예비)교원-교육청-양성교육기관-교육부-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95%	5%

- ▶ 초등보다 중등의 양성 규모 축소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으며, 체제발전 방향에 찬성도가 높았음, 양성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찬반 유사

	질문	찬성			반대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음	찬성	반대
양성 규모	초등교원의 양성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23%	31%	33%	11%	1%	54%	44%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32%	40%	20%	7%	1%	71%	27%
체제발전 방향	초등교원의 목적형 양성 체제 유지와 체제개편을 통한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를 전제로 단계적이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체제개편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26%	55%	11%	7%	1%	81%	17%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중등교원 양성경로를 정비해야 한다.	40%	46%	11%	3%	0%	85%	14%
연결 의제	교원양성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성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2%	26%	28%	21%	2%	49%	49%

- 5차 숙의 전반에 숙의단 구성원의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한 협의문(안)을 6차 숙의까지 검토하여 확정(11.21, 12.5)

※ 이메일, 정책 집중 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의문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일정 및 주요 활동 >

숙의 일정	주요 활동	비고
1차(9.26)	- 의사규칙 논의 및 국가교육회의 발제 - 미래 교육 및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논의	권역별 경청회 결과 공유
숙의단 의제 제안·각종 참고자료 취합 및 공유 (~10.8)		
2차(10.9)	- 의사규칙 확정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키워드 및 주요 의제 선정 논의	
3차(10.24)	-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원양성 규모’로 의제 선정 - 쟁점 토론	여론조사 결과 공유
일부 단체의 입장문·의견서 공유 (~11.6)		
4차(11.7)	- 외부 전문가·숙의단 구성원 발표 - 쟁점 토론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숙의 조사 문항 마련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실시 (11.14~15)		
5차(11.21)	- 숙의단 구성원 발표 및 쟁점 토론 - 협의문 초안 검토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결과 공유
협의문 검토안 수정 의견수렴 (이메일, 정책 집중 숙의 홈페이지 등)		
6차(12.5)	- 협의문 수정안 검토* 및 최종안 확정	

* (참고) 협의문 수정안 검토 방법 : 숙의단 동의로 결정

- | |
|--|
| <p>①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숙의를 거쳐 마련된 협의문 수정안을 각 항별로 검토</p> <p>② 수정 의견 제시 → 전체 의견 확인 → 동의 → 수정</p> <p>③ 수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이견 해소 대안 탐색 → 동의 여부 결정 → 수정</p> <p>④ 이견 해소가 어려운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2/3 동의로 결정 (2/3 미달 시 다수, 소수 의견 병기)</p> |
|--|

IV. 정책 집중 숙의 결과 : 협의문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정책 집중 숙의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하고, 이후 정책 집중 속의 결과 전체를 백서로 제작하여 올해 말까지 배포 예정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협의문

제4차 산업혁명, 고용 불안, 인구감소, 전염병 확산, 기후 위기 등 급속한 사회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마련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공감하고 예비교원단체·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등 32명을 국민을 대표하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단(이하 숙의단)으로 초청하였다. 숙의단은 2020년 9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5일까지 6차의 숙의를 진행하였다. 숙의단은 1차와 2차 숙의 전반에 운영규칙을 확정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후반 및 3차 숙의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쟁점¹⁾을 토론하고 중요성, 시급성,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다. 4차와 5차 전반 숙의에서는 선정된 의제에 대한 숙의단 내 관련 단체 대표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5차 후반 및 6차 숙의에서는 협의문 초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숙의 과정에서 권역별 경청회, 숙의단 구성원의 의제 제안 및 의견서²⁾, 국민 여론조사와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결과 등을 공유하였다. 다음 협의문은 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담은 것이다.

1.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의제 선정

- 숙의단은 미래 교육이 학습자의 삶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역량³⁾을 강화하는 교육·학습 생태계⁴⁾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교원의 역할과 역량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교원의 역할은 지식교육자를 넘어서서 ‘학습 촉진자’, ‘기획자’, ‘소통·협력자’, ‘평생 학습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해와 공감’, ‘소통’, ‘지역과의 연계’, ‘협업’ 등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 역량을 갖춘 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교원의 자격, 임용, 재교육,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 다른 교육 의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1)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원양성 규모, 교원임용시험,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연계·통합, 양성 기간 연장,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2) 숙의단 구성원이 제안한 다양한 교육 문제와 의견은 [정책집중숙의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2015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교육의 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 제시되었다. OECD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4) 교육생태계와 학습생태계 중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병기하기로 하였다. 교육·학습 생태계는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만 교육·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사회 제도, 공간 등도 명시적·잠재적 교육·학습의 기능을 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사회적·물리적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교원양성 교육과정 발전 방향

- 숙의단은 현행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양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구체적인 상(像)과 기준이 불명료하고,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새로운 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숙의단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양성 교육과정이 다음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원의 상(像)과 기준을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에 기초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내용과 학습자 이해와 소통, 학부모 소통, 지역사회 연계, 교원 간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수업,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3.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

- 숙의단은 교원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의 불균형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임용 규모에 따라 양성 규모를 관리해왔던 초등교원 양성체제는 목적형⁵⁾ 체제의 특성에 맞게 정부가 양성정원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큰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 다만, 초등과 중등교원의 적정 양성 규모를 검토할 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⁶⁾

5) 여기서 '목적형'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임용 규모를 고려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6) 교육부는 2023~2024년의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2020. 7. 23.,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4.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 숙의단은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다음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성 규모 관리와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방안으로는 교육대학교 간 권역별 통합, 교육대학교와 거점국립대학교 간 통합, 학습자 발달 중심의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⁷⁾
- 숙의단은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다음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교육의 질 제고와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양성경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양성기관 질 관리⁸⁾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과정은 사범대학에서 개설하는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⁹⁾
- 숙의단은 이러한 방향의 교원양성체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부는 교원양성기관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정부는 체제 변화로 인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추가 제안 사항¹⁰⁾

- 숙의단은 주요 의제와의 연결성 속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제약이 되는 교원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교원양성 교육 기간을 5~6년으로 늘이거나, 교원양성 체제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혁신, 양성 규모 적정화 등을 추진 하면서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7)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협의문 본문에 담았으며, 해당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각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8) 현재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9)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협의문 본문에 담았으며, 해당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문장의 말미를 '논의하였다'로 표현하거나 각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10) 미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교의 교육 여건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수습교사제나 수습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6. 향후 이행 방식

○ 숙의단은 다음의 향후 이행 방식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는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예비)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¹¹⁾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원 양성과정이 현장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교원양성기관과 학교·교육청의 상시적 협업이 필요하다.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숙의단 일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윤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 이혁규 김왕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이수빈 박동혁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한문섭

전국국공립대학교교육대학원장협의회 양동석

전국국공립대학교사범대학장협의회 홍창남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황규호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 김준식 박민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울산광역시교육청 박미향

전라남도교육청 임명희

충청북도교육청 염승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인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교육희망네트워크 변춘희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극단 북새통 남인우

꿈지락네트워크 김규진

단국대학교 양영유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김상미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박은진

피스모모 문아영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한국개발연구원 이태석

한국교육학회 조난심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 소속단체명 가나다순

11) 교육부는 거버넌스 기구와의 협력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

-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한다.
 - **(교육부)** 교육부는 (예비)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룬 시일 안에 구축하여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현장 관련 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VI. 향후 계획

- 정책 집중 속의 결과 발표 : 12.15(화)
- 국가교육회의 2020 대국민 보고대회 : 12.22(화)
- ※ 정책 집중 속의 결과를 포함한 국가교육회의 3기 활동 및 국민 참여 의제 등 발표